

전남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올해 346억 투입 3736개 제공 동료상담·전남형 권리중심 등 자립생활 지원·소득보장 강화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도 최선”

전라남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46억 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341개 증가한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 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에는 크게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 자리는 100% 지방비로 지원한다.

공공 분야 일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일자리에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 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으며 도내 65개 제공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

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를 도와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와 이동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종중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최종중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은 심한 장애로 민간 노동시장이

나 기존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권익 옹호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체험 △강의·공연 등 인식개선, 3가지 유형으로 운용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중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권리중심 최종중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9개 광역단체의 참여자 10명당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비교되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

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 대상은 전남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 10월 예정인 ‘제2회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골목경제상황실 가동 “소상공인 보호”

밀착 정책·공공기관 협력 강화 시 산하 골목상권 조직 신설 검토

광주광역시와 골목상권 주변 도로의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전통시장·골목상점가 1대1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18일 기획조정실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첫 회의 개최와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광주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골목경제 상황실’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공공기관에서는 장보기, 점심식사 골목 식당 가기, 전통시장 이용 확대, 소상공인 홍보광고 제작 등 기관별 소비 촉진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광산구 금호타이어 인근 골목상권 내 식당으로 이동해 오찬을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본격 운영하고,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공공배달앱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배달 수수료 절감·공정한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교육생 모집 명인 농장 현장 실습 등 진행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교육생(멘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오랜 영농경험과 연구를 통해 선도적 유기농업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지원사업은 유기농 명인의 전문적 맞춤 지도를 통해 초보 친환경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농 명인 18명이 멘토로 활동한다.

멘토링 희망(멘티) 대상자는 전남에 거주 중인 친환경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도민이다. 멘토링 비용은 전액 무료다.

멘토링은 명인 농장 현장 실습과 교육생 농장 방문 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참가자(멘티)의 요청 사항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육묘, 토양과 제초 관리, 병해충 방제, 작물 재배, 유기농 자재 제조법 등이다. 채소, 벼, 과수, 축산, 녹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기술이 전수된다.

참가 신청은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의 (친환경)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줄 예정이다.

유기농 명인과 함께하는 멘토링은 단순한 일회성 지도가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명인의 노하우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자신의 농장에 바로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멘토링을 받은 교육생이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이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험 많은 명인의 현장 지도를 통해 유기농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동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임택 광주 동구청장(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18일 대전 중구청에서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범민 금산군수, 함영준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문제 해결 방안,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시, 전국 7개 지자체와 ‘혁신행정 멘토링’

AI 당지기 등 정책 과정성과 공유 혁신 우수사례 도입 위한 소통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열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AI당지기’ 등 광주시 주요 혁신행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멘토링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서의 혁신 경험을 타 지자체에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실무진과 경남 창원시, 전북 정읍·군산시, 전남 광양시, 장흥·구례·강진군 등 7개 멘티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번 멘토링을 통해 △국제도 시혁신상 및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최초로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 ‘AI 당지기’ 등 대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시행착오·해결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의 ‘AI 당지기’는 당직제 폐지와 맞물려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개선한 사례로, 멘티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시민이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평가박람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행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무자 간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광주만의 창의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강 시장 “시내버스 파업 중단하고 요금 현실화 논의를”

지노위 조정 임금인상 3% 수용 촉구 “협업체 구성해 처우개선 논의 필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시내버스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 구성을 통해 임금조정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 인상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파업을

중요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갈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버스요금 현실화 방안을 포함해 추가 임금조정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오전 5시30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광주시가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 순환1-B를 타고 승객들을 만나고 버스 운행 상황을 살폈다”며 “현장에 가보니 버스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서민들의 몫

이었고, 파업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임금뿐 아니라 정년 연장,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긴급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 중단·협업체 구성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상아 기자